

<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석유화학과 플라스틱의 공생?

석유화학과 플라스틱이 공생한다?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산업 관련 1100여개사가 공동으로 「플라스틱 환경 비상(?) 대책협의회」를 설립, 플라스틱의 환경친화성을 제고시켜 정부의 규제에 대응키로 했다고 한다.

한국에 석유화학과 플라스틱산업이 태동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공생」이라는 용어가 웬지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평생 앙숙이요, 「오월동주」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양 산업이 공동으로 「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는 것도 어쩐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다.

「비상대책협의회」는 환경부가 일부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입법화를 적극 저지하고, IMF로 극도로 어려워진 경영난 현실을 부각시켜 규제보다는 제도 개선과 재활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 자체적으로 세부추진사항을 마련해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플라스틱의 환경친화성을 검증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조의 전과정 평가를 의뢰하며, 「플라스틱 환경개선 및 안전성 연구회」를 운영하고,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기 위해 월간지 「플라스틱과 환경」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합성수지 가격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전개하며 상호비방을 일삼화하던 양 산업계가 공존공영을 외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 산업은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석유화학에 속하고, 상호협조 없이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화학저널은 창간이후 석유화학과 플라스틱이 협력관계를 복원·유지할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한 바 있고, 「너 죽고 나 살기」식 공멸적 영업방식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허공에 외친 메아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작금에 석유화학과 플라스틱이 「공존공영」을 외치는 모양새를 보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석유화학이 살고, 플라스틱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플라스틱 사용규제 및 재활용 강화는 한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이라고 특별히 대세를 거스를만한 이유도 없다. 특히, 석유화학과 플라스틱산업계는 7~8년전부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답시고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쇼핑백과 도시락 등 플라스틱제품 사용을 억제키로 하자 석유화학과 플라스틱이 「공존공영」을 외치기 시작, 5000여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몰렸다면 아우성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소 플라스틱 가공기업들은 시행령이 통과되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몰리게 된다면 환경부 안이 법제화될 경우 5000여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2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며, 매년 1조원의 국가부담이 생겨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억지」 이상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SK를 비롯 현대석유화학, LG화학, 대림산업, 삼성종합화학 등 8개 HDPE 메이커들과 금호케미칼, 동부한농화학, 제일모직 등 6개 PS 메이커들이 20% 이상의 수요감소가 불가피하고,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경우 미수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타당성 없는 「사적 이기주의」일 뿐이다.

환경부가 98년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10평이상 영업장에서 합성수지제 봉투·쇼핑백 무상제공을 금지키로 하고, 플라스틱 도시락용기 사용을 억제시키며, 분리가 어려운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용기 제조를 금지키로 한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한국의 환경오염실태로 보아서도 지극히 당연하고도 타당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석유화학기업들이 환경부가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경우 연간 200억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합성수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가 『플라스틱은 써지 않아 공간을 차지할 뿐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규제방침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것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 기반을 말살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환경오염 방지 및 플라스틱 재활용 규제강화는 대세이지 선택적 「사적 이기주의」의 도구가 아니다.